

보도	2025.4.4.(금) 조간	배포	2025.4.3.(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책임자	국 장	박진호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도희	(02-3145-7210)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박진우	(02-3705-5211)
		담당자	부 장	정재호	(02-3705-539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보상**을 대폭 확대
- **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의 경우 **준법제보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

I.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11.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습니다.
 - * 최근 5년간('20.1월~'24.7월)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
- 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 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되어
 - * 3.25일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 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제하 보도자료 참고
 -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한눈에 보는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 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1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 내부고발 → 긍정적 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2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3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 (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 제외)

-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 확대 :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추가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

4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최대 지급한도 상향 및 최저 포상금 도입

1. 준법제보 제도 정비

	AS-IS	TO-BE
제도 명칭	내부고발	준법제보
제보 주체	임직원	누구든지
제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 금융사고와 무관한 성희롱·성추행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 무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포함 • 성희롱·성추행을 준법제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센터 분리 운영

가 제도 명칭 변경

- ☐ (현황) '**내부고발**'은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이나, 부정적 어감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측면
- ☐ (개선) 제도 명칭을 긍정적 표현인 '**준법제보**'로 변경

나 제보 주체 확대

- ☐ (현황) '**은행 임직원**'만이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신고 가능
- ☐ (개선)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준법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제보 가능

다 제보 대상 정비

- ☐ (현황)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등 신고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며, 금융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성희롱·성추행 등)도 대상에 포함
- ☐ (개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

* 단, 관리자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거나, 준법감시·검사부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준법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 강화

	AS-IS	TO-BE
외부 접수채널	일부 은행만 운영	외부 접수채널 도입 또는 외부 접수에 준하는 익명성 보장채널 운영
서약서 징구대상	조사대상 임직원(피제보자 등)	조사·검사담당 직원 및 포상금 지급, 인사조치 담당까지 포함하여 징구
포상금 심의절차	제보자 신원 공개	제보자 신원 비공개
불이익 조치	유형, 추정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음, 제보자에게 입증책임 부과	유형, 추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 전환

가 접수채널 다양화

- ☐ (현황)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채널만을 운영하거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신고채널을 미운영 중
- ☐ (개선)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을 도입*

* 은행 내부채널의 경우 외부 접수채널에 준하는 수준의 익명성 보장 장치 마련

나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대상 확대

- ☐ (현황)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제보내용(제보자 신원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 ☐ (개선)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 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

다 포상금 심의절차 개선

- (현황) 포상금 지급 등 심의 시 부득이하게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 (개선) 제보자 신원노출 최소화를 위해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절차 진행*

* 준법제보 담당 부서장이 제보자 신원 확인 후 비공개(내·외부인 여부도 특정 불가)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면, 그 외 심의위원은 제보내용, 사고 적발·예방 기여도 등만 평가하여 심의 진행

라 불이익조치 인정범위 명확화 등

- (현황) 내부고발을 이유로 고발자에게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추상적으로 규정**
- (개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
 - (불이익조치 유형)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동료평가지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등
 - (입증책임 전환) 불이익조치 추정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여 제보자 보호를 강화**

* ①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② 준법제보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실질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

3. 제보 관련 임직원 징계 감면 · 가중 재설계

	AS-IS	TO-BE
준법제보자 징계 감면기준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 감면 적용(예측가능성 低)	준법제보자에 대한 감면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징계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대상	3억원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조사대상자 범위 미설정, 준법제보의무 준수여부 조사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점 임직원 등 대상으로 조사 준법제보+금융사고 보고의무 준수여부 조사

가 준법제보자 징계 감면 기준

- ☐ (현황)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해당 행위를 제보 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불분명**
- ☐ (개선)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위법·부당행위 단순 가담·추종자로서 지체없이 제보하여 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 효과가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 고려(단, 위법·부당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제외)

나 사고 발생시 조사대상 확대

- ☐ (현황) **3억원(사고금액)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내부고발 여부 조사
- ☐ (개선) **사고금액과는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및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

*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1항

1. 사고금액 3억원 이상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형법」, 「특경가법」 관련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였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합하여 가중 제재

4.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확대

	AS-IS	TO-BE
구조금 제도	미운영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포상금 산정기준	손실예방기여금액의 일정 비율 (산출불가시 심의를 통해 포상금 결정)	사고(관련)금액의 일정 비율(10~30%) (산출불가시 등급별 기준금액의 일정 비율)
최저포상금	일부 은행만 운영	全 은행 최저포상금 100만원 도입
포상금 한도	1천만원~20억원*	10억원~20억원*
포상금 지급대상	금융사고 조기 인지, 사고손실 최소화,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해당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 적발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포상금·구조금 지급방식	각 은행이 지급	은행연합회가 지급

* 특수은행(기업·산업 등)은 제외, 특수은행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별도 결정

가 구조금 제도 도입

- ☐ (현황) 포상금 外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없음
- ☐ (개선)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

나 포상금 산정기준 정비

- ☐ (현황)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제보내용의 손실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어 포상금 규모 예측이 곤란
- ☐ (개선) 포상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
 - * 다만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포상금 산정
- 또한, 금융사고 적발·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 포상금(100만원)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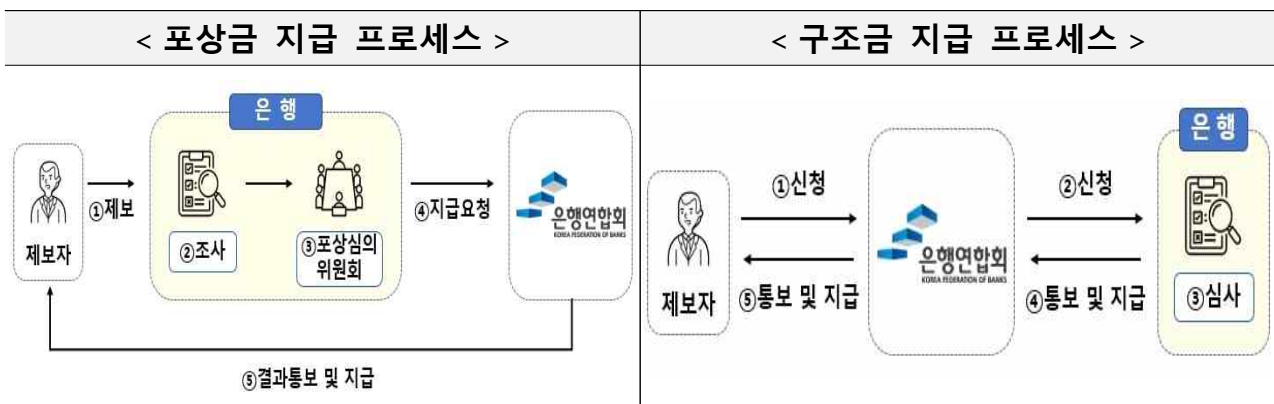
다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 (현황) 은행별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0.1~20억원) 편차가 크고, 제보내용과 금융사고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포상금 지급
- (개선) 준법제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공시 추진
 - * (현행) 1천만원 ~ 20억원 → (개선) 10억원 ~ 20억원
- 제보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적발하는 등 사고예방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 ※ 단, 정부의 예산 적용을 받는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적정 포상금 지급한도를 별도 결정

라 포상금·구조금 지급 방식

- (현황) 개별 은행이 해당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 등 보상 지급
- (개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의 경우 은행 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

☞ 제3자인 은행연합회가 전담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금 신청시 제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포상금·구조금 지급 절차 및 과정 안내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운영 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 앞으로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되어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 나아가,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Speak up)하는 등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계획**
 - **(은행권 내규 개정 등)** 은행연합회는 '25.4월 중 동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25.7.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행여부 점검 및 지도)** 금융감독원은 동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제도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준법제보 여부 확인 등 처리현황도 점검
 - 또한,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등의 관리의무에 준법제보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권 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은행은 준법제보 관련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 지속)** 금융감독원은 금번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부탁말씀)** 금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소비자포털)를 통하여 준법제보 제도 내용 및 은행별 제보채널·방법·포상금 등 상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